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2019. 8. 26.(월) ~9. 3.(화), 독일, 네덜란드》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 5

1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 5

2 독일연방의회 ····· 19

3 SED 독재청산재단 ····· 27

4 독일연방정치교육원 ····· 40

5 네덜란드 호른베이크 직업학교 ····· 48

6 이준열사기념관 ····· 58

7 기타 현장방문 ····· 62

Ⅲ. 연수후기 ····· 65

〈참고〉 언론 보도자료 ····· 68

Ⅰ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 준비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우수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준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 실시

○ 이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간 대립관계에서 한발 앞서 1990년 동·서독 평화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올해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이자, 2020년 통일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독일을 방문하여 통일 전·후의 실패 및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 사례 발굴 및 탐색을 위한 정책연수 추진

○ 통일 이후 동독의 재건 및 통합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준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남·북한 통일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함

○ 또한,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국가인 네덜란드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 증가 기회를 살펴보고, 평생학습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연수개요

○ 연수주제 : 독일 평화통일실현 및 네덜란드 평생교육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 연수기간 : 2019. 8. 26.(월) ~ 9. 3.(화) [7박 9일]

○ 연 수 국 : 독일, 네덜란드

○ 연수대상 : 13명(명단 별첨)

- 의　　원(8)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8
- 직　　원(5) : 전문위원실 5

□ 연수내용

○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재건 및 발전 현장을 직접 견학하여 분단되어 생활하던 국민들이 통일 이후 어떻게 이념적으로 통합되어 가는지 등에 대한 사회통합 양상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통일준비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 독일의 평화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의 중요성과 통일 공감대 형성 및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기반 확보 및 협력 유도의 중요성 이해

○ 구 동독체제와 관련된 독재청산의 필요성, 독일통일과정에서 독재청산의 성과 및 실패 사례 파악

○ 분단의 상징인 브라덴부르크문, 베를린 장벽 견학 및 통일 이후 동독지역 변화 등에 대한 자료수집

○ 독일 사례로 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방안 및 남북한 주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동독 이주민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도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발굴에 기여

○ 독일연방의회 방문 면담 및 청사 내 시설견학

- 독일 선거제도, 연방의회 구성 및 회기 운영 실무,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청취

○ 네덜란드의 선진 평생학습정책 및 학습도시 조성 노하우, 학습도시를 통한 지역혁신 전략을 벤치마킹

□ 기대효과

○ 통일 준비 및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통합 과정에 대해 현지 전문가의 경험을 직접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등을 사전 점검하여 부작용 최소화 도모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통일 전후 독일 정부의 역할과 노력, 동·서독 주민들 간 통합 의지 등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및 교훈 함양

○ 독일의 통일 및 체제전환 과정과 발전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러 과제와 문제들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방안 모색 가능

○ 네덜란드의 직업교육제도를 분석하여 이와 관련한 지역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도민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도, 시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활성화 도모

□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계			13명	남9, 여4	
도의회 (13명)	행정자치 위원회 (8명)	위원장	국 ○ ○	여	
		부위원장	두 ○ ○	남	
		위 원	김 ○ ○	〃	
		〃	박 ○ ○	〃	
		〃	김 ○ ○	〃	
		〃	김 ○ ○	여	
		〃	문 ○ ○	남	
		〃	홍 ○ ○	여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5명)	주무관	신 ○ ○	〃	
		〃	안 ○ ○	〃	
		〃	김 ○ ○	〃	
		〃	이 ○ ○	〃	
		〃	설 ○ ○	여	

□ 연수일정

일자	방문지역	공 식 일 정	비고
8/26(월)	전주 인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 도의회 집결 후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인천 국제공항 →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경유) ○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 ○ 호텔 이동 및 휴식	1일
8/27(화)	베를린	○ ①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공식방문> – 독일통일 사례를 통한 한국정치와 한반도 통일 연구내용 청취 ○ ② 독일연방의회 <공식방문> – 독일 국회법 담당 부서장 등 면담 및 청사 내 시설 견학	2일
8/28(수)	베를린	○ 독일 분단 현장 등 역사시설 방문 – 브란덴부르크 문, 체크포인트 찰리, 베를린장벽기념관 등 ○ ③ SED 독재청산재단 <공식방문> –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으로서 구 동독 독재청산작업 실태 파악	3일
8/29(목)	베를린	○④ 독일연방정치교육원 <공식방문> – 통일을 전후로 한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현황 파악	4일
8/30(금)	베를린 암스테르담 아메르스포르트	○베를린 쉐네펠트 국제공항 → 암스테르담 국제공항 ○⑤ 호른베이크(Hoornbeeck Colleage) 직업학교 Amersfoort <공식방문> – 네덜란드 직업교육제도의 특징 및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면담	5일
8/31(토)	덴하그	○⑥ 이준열사기념관 방문 <공식방문> – 유럽에 있는 유일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인 이준열사기념관 견학 및 관장님 면담 ○ 네덜란드 평생교육 관련 자료 수집	6일
9/1(일)	암스테르담	○ 수집자료 정리 및 정책연수 간담회 실시 – 연수자료를 토대로 정책 벤치마킹 방안 연구	7일
9/2(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 암스테르담 국제공항 →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경유) ○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8일
9/3(화)	인천 전주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및 해산	9일

Ⅱ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1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 방문개요

○ 방문일정 : '19. 8. 27.(화) 10:00

○ 주　　소 : Kaiserswerther Str. 16-18, 14195 Berlin, Germany

○ 홈페이지 : https://www.fu-berlin.de

○ 면 담 자 : Dr. Sangkuk Kim(김상국 박사)

○ 기관개요 :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연구소는 독일 내 손꼽히는 한국학 교육기관으로 독일의 통일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정치와 한반도 통일을 연구해오고 있음

○ 면담주제 : 동·서독 통일과정 등 사례를 바탕으로 한 독일 통일정책의 교훈과 남북한 한반도 발전관계에 대한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한반도 상황에 맞는 남북한 통일 방향 등 논의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외부 전경

□ 연수내용

○ 올해는 독일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된 해이며, 내년이면 통일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방문임. 독일 경제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를 통해 독일 통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통일시기 동독의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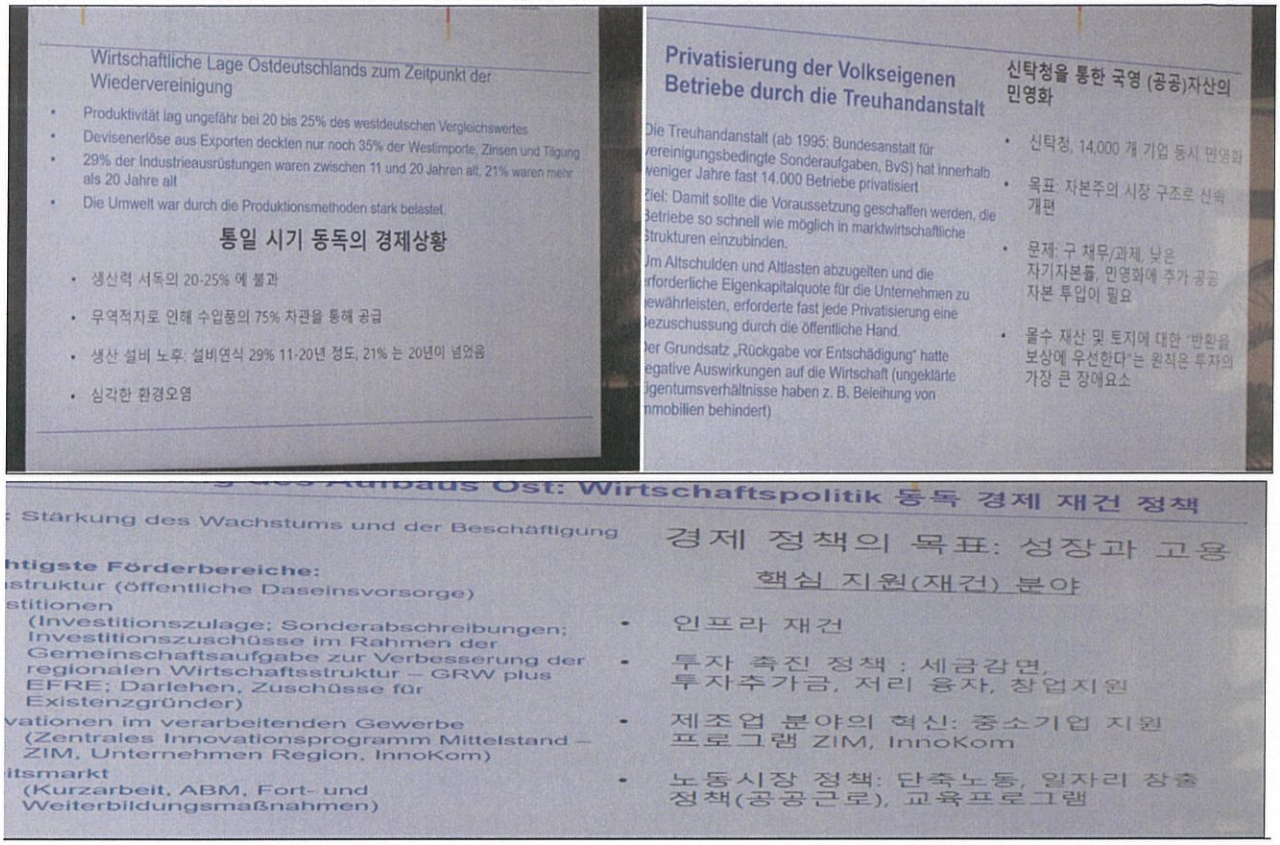
○ 통일시기 동독의 경제상황은 1980년대까지는 대외적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통일 바로 직후 동·서독의 경제상황을 비교한 결과 사실은 동독의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동독의 생산력은 서독의 20%에 불과하였고, 무역적자 또한 계속 지속되던 상황으로 동독에서는 75%의 필요물품을 서독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지경이었으며, 이것이 동·서독 간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중요한 키(Key)로 작용하였음

-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동독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모순이 있었고, 동독 경제가 유럽 동부권 경제에 예속되어있었던 것인데, 가령 동독에서는 자신들이 실제로 필요한 물품이 아닌, 동부권과 소련에서 필요한 중공업·화학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형태였음. 한편, 서독에서도 동독과 마찬가지로 중공업이 발달하였는데, 동·서독 양 국가에서 같은 산업이 성장하다보니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통일 이후 독일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게다가 동독의 경우 동부권에서 필요한 중공업과 화학 상품들을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보니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서독이 원체 자본주의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준으로 발달한 상황에서 동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동독의 생산설비가 굉장히 노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당시의 동독뿐만 아니라, **현재의 북한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서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음. 통계적으로 북한 생산설비의 대략 60% 정도가 20년이 지난 노후설비로 나타나는데, 현재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서는 10년만 늦어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년이 넘었다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브리핑 자료 사진

○ 동·서독 통합 이후 경제적으로 실시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탁청을 통해 동독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영자산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14,000여개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임. 이중고였던 것은 동독에서만 14,000개 기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동부권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 과공급 현상이 나타나 기업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음. 동·서독이 통합될 때 서독에서는 이러한 14,000개 기업을 매각한 돈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후에 그러한 기업을 매각하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이를 통해 동독 공산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구조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고, 경쟁력이 없는 구조였는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동독과 서독은 처음 통일이 실현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통일 독일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강화될 줄로 착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동독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막연히 서독이 동독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한 착각의 이유 중 하나가 동독의 국토 면적이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 또한 5분의 1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임

☞ **이처럼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며 살아온 국가를 새로운 다른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일 독일의 경제정책에 있어 핵심은 성장과 고용이었는데, 고용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으며, 동·서독 통일과 동시에 300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나오게 되었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독의 경제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확고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독의 경쟁기업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음

▣ 동독의 경제성장 방향

○ 한편, 동독의 핵심적인 경제성장 방향은 인프라 재건, 투자혁신정책, 세금감면, 창업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재정충당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과 지방교부금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부분은 해외에 국채를 발행하여 동·서독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었음. 이 과정에서 2000년대까지 독일의 부채율이 40%에서 60%까지 급속도로 상승하였음. 하지만 당시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채가 부쩍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2008년~2009년 당시의 금융위기와 비교한다면 부채증가율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음

▣ GDP를 통해 살펴본 독일 경제

○ 동·서독 경제 통합의 핵심적인 부분은 GDP 구조로 1960년부터 빠른 속도로 GDP가 상승하다가 1990년 이후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동독을 재건하기 위해 1990년도 중반까지는 기간시설, 기반산업을 통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붐이 일어났었다가 그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GDP 상승곡선이 정체되기 시작하였던 것임

▣ 통일이 되기까지 누적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

○ 동·서독 통합경제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동독과 서독의 경제수준이 통일 이후에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동독이 아무리 빨리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더라도 서독 또한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장을 한다는 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임

○ 독일은 월급노동자 비중이 많아 통일 이후에도 동독 쪽과 서독 쪽의 GDP는 비슷하게 구성되는데, 증여세, 재산세 비중을 보게 되면 서독이 동독의 30배 정도가 되었음. 다시 말해 동독과 서독은 통일 이후 소득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동안 축적된 부의 상황에 따른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자산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통일 이후 동독은 많은 재건과 성장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중소기업 중심으로써 아직까지 대기업 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보편적으로 대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부가가치와 R&D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지만, 동독에는 대기업 본사가 없는 이유로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독일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제조업 총생산량을 보면 물론 서독과 비교하여서는 현격하게 낮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영국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동독이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민간경제 부분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

○ 독일 정부에서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동독 지역에 할 수는 있겠으나 민간투자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특히나 국가가 투자하는 R&D는 민간경제에 비해 7:3 또는 6:4 정도로 규모가 작아 민간경제의 비중이 훨씬 큰 상황이었음. 독일 5대 대기업이 투자하는 민간 R&D가 실제로 국가 전체가 투자하는 양보다 많은 상황에서 현재 동독에 대기업이 없다는 사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경제 분야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동독 내에서조차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가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별 제조업 분야 GDP 통계상 아직까지도 동독이 서유럽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독일 국민의 생활만족도

○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6%가 채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임. 통일 이후 독일을 평가할 때 경제적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동·서독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와 관련한 기대수치, 즉, 생활만족도임. 통일 이후 동독의 이러한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높아졌음에도 동·서독간의 통합에 있어서 불만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서독 수준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동독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탓이었음

▣ 통일 이후 서독 성장의 가속화

○ 동·서독이 통일한 시점에 동독 사업지역에 붐이 일어나게 되고, 서독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동독지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면서 더욱 더 강성한 국가로 성장하였음. 당시 서독은 세계 수출 1위국으로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였고, 서독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농산물들로 동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일 이전부터 경제강대국이었던 서독은 통일 이후 자신들의 상품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1,600만명의 동독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

○ 통일비용에 대한 한가지를 논하자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복지비, 연금, 실업보험 등의 통일비용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렇게 동독 주민들이 지원받은 예산은 대부분 서독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음. 또한 동독의 150만 명의 건실한 노동력이 서독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음. 이처럼 서독기업의 부흥을 일으키며, 서독 지역에 성장특수를 가져오는데 동독이 굉장히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것도 통일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사실상 이 부분을 비용으로 정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서독의 경제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통일비용 요소도 존재함. **부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려 하나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때에는 서로의 각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거나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 통일비용이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구조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에서 남·북한의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율 등을 통해 확인하는 현재의 동·서독 생활만족도

○ 또한, 동·서독 통일 이후를 논할 경우 단편적으로는 동독사람들이 대부분 통일에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환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여 사람들의 만족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과 미래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동독 주민들의 출산율까지 동반 하락하게 됨. 독일역사에 있어서 출산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한 시기가 바로 통일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1인당 평균 출산율이 2.0명에서 0.8명으로까지 떨어지게 되었음

- 현재는 생활수준에 있어서 큰 격차가 줄어들면서 출산율, 평균수명, 자살률의 경우 동독과 서독이 서로 유사한 정도로 산출이 되고 있음. 이 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에서 동·서독간의 생활수준에 그렇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현재 동독과 서독 지역에서 상호 인구이동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990년대 통일 이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엄청난 인구가 이동하게 된 계기를 언급하자면 그것은 바로 평화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 동·서독의 화폐가치 비율

○ 실질적으로 동독, 서독의 화폐가치의 비율은 1:4정도 이었으나, 동독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화폐단위를 1:1의 가치로 교환을 실시하게 됨. 이러한 화폐교환의 이유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주민들 만큼 임금 보증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음. 그러나 이것은 조삼모사의 성격으로 비록 동독 주민들이 임금은 많이 받았을지라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가격이 4배로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당초의 환호성은 곧 기업경영의 부실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라는 부메랑으로 동독을 강타하였음

- 동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약 1년 후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었던 것임. 서독의 많은 기업들이 낮은 임금의 이점을 노리고, 동독지역으로 진출하기를 원했지만 화폐 가치 1:1 교환으로 인해 동독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서독 기업들이 동독지역에는 투자하지 않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음. 또한 당시 채무가 있었던 동독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채무액이 4배로 상승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던 것임

▣ 동독의 환경문제

○ 또한 동독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굉장히 많은 환경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동독은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환경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들이 1980년대 후반에 동독에서 반체제 운동 등으로 정부에 저항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요소가 되었음

- 현재 이러한 환경문제가 북한 내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로로 관측되고 있음. 동독에서의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폐수, 폐토양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우라늄 방사능이 존재하였다는 것임. 이것은 동독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소련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던 것으로서, 이러한 동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라늄 폐기비용만 수십억 원이 소요되었음

☞ **이러한 환경문제와 상황이 지금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는 자세가 중요**

□ 질의답변

◆ 북한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통일 직전 동독에서 사유재산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면 토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 당시 토지 관련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였음. 동독의 경우 소련이 신탁통치를 할 때에 나치에 협력했던 대지주(부르주아)의 토지를 몰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배분하였고, 나머지 토지 소유는 그대로 놔두었는데, 그럼에도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토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이후에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고, 몰수됐던 토지를 되돌려 받았더라도 이미 40년이 지난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소송만 해도 수십만 건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토지에 대한 실소유권을 밝히는 기간 때문에 경제투자를 이루는 데에도 힘든 장애물로 작용하였음

⇒ 한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남한과 북한이 자본주의체제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토지는 공용으로 정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합리적인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임. 독일의 예를 들면 쇼핑센터 하나를 짓고자 하더라도 소유권이 밝혀지지 않은 토지가 있어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가정집들 사이에도 소유권이 밝혀지지 않는 토지가 있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함

⇒ 한반도의 경우 분단 기간이 70년이 넘어 독일보다 훨씬 오랫동안 분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상속문제와 토지소유권 문제 등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슬기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들도 있는지?

⇒ 한국 유학생은 없고,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독일 학생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학생들이 매년 60명 정도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석·박사 과정까지 수료하는 학생들도 있음

◆ 석·박사 과정 이후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 이곳에서는 학생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기능만을 수행하며, 취업에 대해서는 대학이 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교수진 구성에 비해 지원자가 더욱 많아 이를 수용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음.

◆ 이곳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 우리 한국학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학문·학술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 김일성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독일의 국립대학으로서 중세 서원에 대한 아카데미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음

◆ 통일이 이루어지면 경제 분야도 중요하지만 정치체제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인데 동·서독 통일을 기반으로 삼아서 남·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 일단 동·서독의 통일을 체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산주의 동독과 자본주의 서독이 통일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 동안 동독 내에서 국민들을 통한 평화협력이 있어 왔고, 공산정권이 실각을 한 이후 새롭게 뽑힌 정부와 7개월간의 통일을 준비한 과정이 있었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 드러날 만한 변화가 있어야 함.

⇒ 한국 등의 나라에서 통일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이룩해 낸 통일에 대해 오로지 결과물만을 이야기 하고, 정작 중요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양국 간에 최소한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1972년 기본협정이 체결된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 국민들의 상호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어 **평화적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에 통일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므로 통일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하여야 함

⇒ 독일의 경우 통일 전,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국가로 전환되어 통일이 되기 쉬웠고, 한반도의 경우 현재 북한이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통일실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통일을 위해서 많은 과제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북한과 동독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함. 그 차이점은 첫 번째로 동독은 서독에게 안보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음. 왜냐하면 서독은 워낙 강대국가였고, 동독자체가 소련 바르샤바 조약국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여 동독응징 시 세계 제3차 대전이 초래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이 존재하였음.

⇒ 반면, 한반도는 국지전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러한 동·서독 간 통일에 있어 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점은 **한반도는 남북한이 전쟁을 이미 한번 겪었지만 동·서독 간 전쟁은 없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음. 결론적으로 **남북한과 동·서독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 서로 비교하기 힘든 케이스**라는 점은 기정사실임. 다만,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분단 사례가 오로지 통일 독일밖에 없다는 점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음

◆ 통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독일은 흡수통일을 하였는데, 흡수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는 동독주민들 때문이었음. 1989년 여름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동독을 개혁하자, 공산주의에 대해 새롭게 개혁을 하자, 제3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갑작스러운 시위가 계속 있어 왔는데, 같은 년 11월부터는 갑자기 동독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자고 외치게 되었고, 서독에서는 국민들이 일어났을 때, 통일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독의 변화, 통일을 바라는 동독국민들의 의지**였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국경을 접한 나라가 많이 없음에도 주요 강대국들이 이면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브리핑 해주신 지도를 보면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이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근접하고 있음. 동독이 통일을 원했을 때 소련의 입장은 어떠하였으며, 다른 강대국에서 통일을 묵인하였는지?

⇒ 서독은 주변국가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독일이 역사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쟁에 의해 국경도 끊임없이 바뀌어 왔으며, 분단 이후 국경은 임시국경이었음. 따라서 독일이 통일이 되면 국경을 다시 수복할 수도 있다는 동부권 국가들의 두려움이 있기도 하였음. 그럼에도 통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서독은 통일의 절대적인 중요성, 민족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양보**를 하였는데, 첫째로 독일 내에 살고 있는

폴란드인을 위해 독일은 그 국경을 포기하였고. 둘째로 유럽연합의 기준화폐였던 서독의 마르크를 유로로 바꾸겠다고 프랑스 등을 설득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함

◆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해체가 동·서독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동·서독이 통일될 쯤에 당시 소련의 해체기미가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 더 이상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소련의 정책이 동독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동독 사람들이 통일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함

◆ 독일이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동방정책을 실시하였는데 동·서독 간 여행을 위한 교류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 1961년 이전, 즉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교류를 유지하다가 장벽이 생긴 이후 통행이 두절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었음. 처음에는 연금 생활자 등이 동독에서 서독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연금생활자가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나중에는 관혼상제 때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다양한 컨퍼런스 등의 만남이 있었으며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하거나, 부분적으로 문화교류도 있었음. 동독의 경우 약 80%가 서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서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동독으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음. 반면 체제에 자신감이 없었던 동독입장으로서는 서독으로의 이동을 강하게 규제하였던 것임.

◆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 동·서독 통일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냉전의 해소로 동·서독의 분위기가 바뀌고, 동부권 진형의 해빙모드가 내정불간섭으로 연결되면서부터임. 하지만 사전에 독일 내에서 통일에 대한 잠재성이 이미 존재하였음.

⇒ **중요한 것은 통일을 부추기는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상황과 흐름의 도움을 받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내부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방송들을 통한 다양한 문화교류와 접촉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동·서독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서로를 하나의 사회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통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일을 지지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한국이 통일을 진정 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아직은 우리 남한 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여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존재함.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한이 북한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도 동독 주민들처럼 통일을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 시사점

○ 남·북한으로 분단된 지금의 한반도와 동·서독으로 나뉘어졌던 독일의 상황 및 객관적 환경·역사 등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깨달은 중요한 점은 통일실현을 위하여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임.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 및 통일의지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남북한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하고, 국가가 그러한 국민들의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해줄 때 가능하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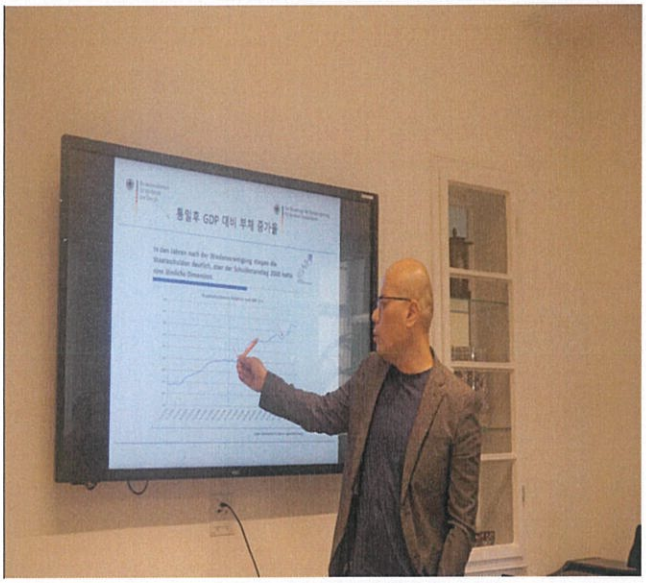
○ 통일 이후에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치·경제의 차이, 생각의 차이, 또한 체제·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에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칠 것이고, 환경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음. 통일 이후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므로 현재 남한과 북한의 차이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먼저 큰 틀에서 마련한 후, 각 분야에 대한 준비 및 해결책을 세부적·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할 것임

○ 또한 통일 이후, 독일이 많은 시련을 겪은 것처럼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며 살아온 사람들과 그 국가가 새로운 다른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우리 전라북도는 통일 이후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한 대비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할 필요성이 큼

□ 관련사진






통일후 GDP 대비 부채 증가율




-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
2019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2019. 8. 26. ~ 9. 3 (독일, 네덜란드)


자유대한민국

2 독일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 방문개요

○ 방문일정 : '19. 8. 27.(화) 15:00~18:30

○ 주　　소 : Platz der Republik 1, 11011 Berlin, Germany

○ 홈페이지 : https://www.bundestag.de

○ 면 담 자 : 올라프비스만(의회법 과장)

이네스 모켄하우프트-고르든 박사(위원회 사무담당 국장)

○ 기관개요 :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은 독일 통일 후 독일 연방의회의 회의 및 의사 결정 기관임

○ 방문목적 : 독일연방의회 방문 면담 및 청사 내 시설견학

- 독일의 정부구조, 독일 선거제도, 연방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청취



독일연방의회 외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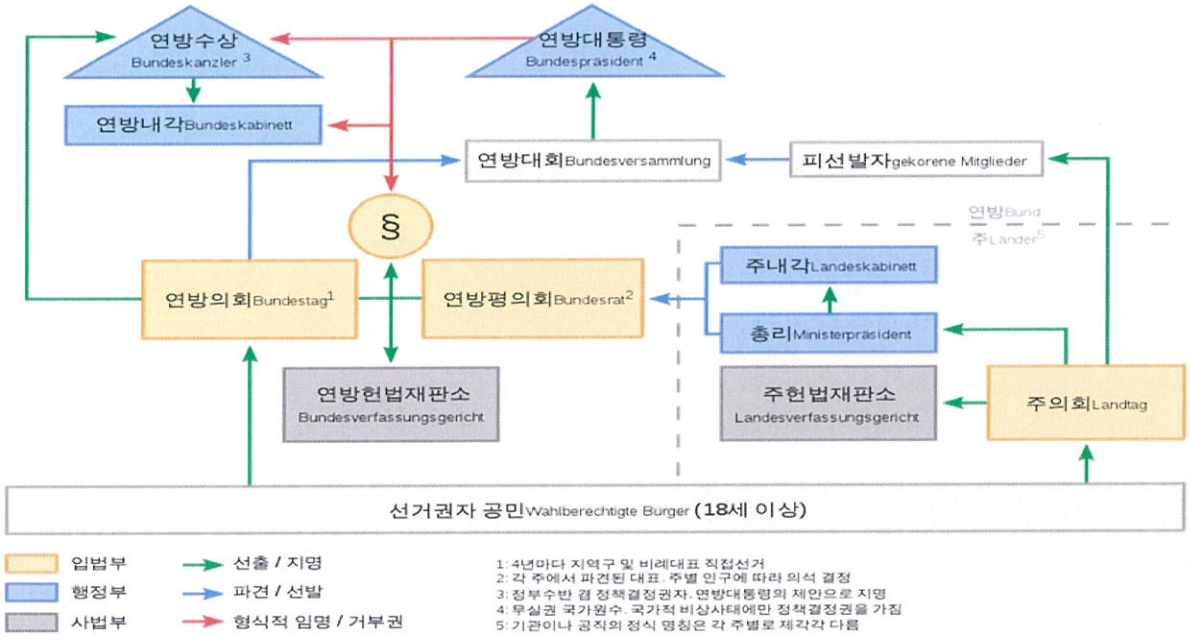
□ 연수내용

▣ 독일의 연방·주·지방정부 구성

○ 독일의 지방정부는 도시주나 소규모 주에서는 단계가 축소된 상태지만 대규모 주 대부분은 단계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 독일 정부의 전체 구성을 보면 연방(Bund), 주(Land), 현Regierungsbezirk), 군(Kreis), 군급 자치시(Kreisfreie Stadt), 게마인데(Gemeinde)의 5단계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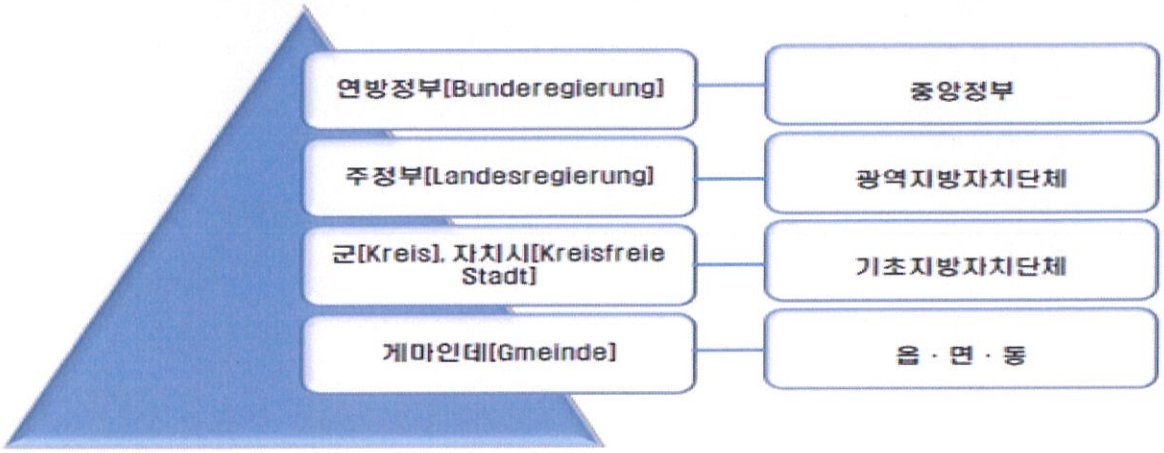
○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강력한 분권이 존재함에도 독일의 국가통합 및 민족적 동질성이 위협받거나 연방으로부터의 일탈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이는 연방의 통일적 법질서체계, 통일된 경제·행정 체계, 정치정당의 전국적인 조직체계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의미함

<독일의 정부 및 의회구조>



○ 독일 자치체계를 한국 시각에서 보면 연방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는 광역자치단체, 군(Kreis), 자치시(Kreisfreie Stadt)는 기초자치단체, 게마인데(Gemeinde)는 읍, 면, 동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 독일의 시각에서 보자면 주정부는 권역수준의 지방정부로 분류할 수 있고, 주정부와 군, 자치시, 게마인데 모두 자치권이 인정됨. 군과 자치시는 주정부 아래에 설치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할 수 있고, 게마인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됨



○ 독일의 상원은 국회에 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국 의회들 중 지방정부의 대표성 수준이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 독일 상원은 16개 주정부의 주총리(지사)와 각부 장관들로 구성되고, 주정부의 주총리(지사)와 각부 장관들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주의회 의원들 중에서 선출됨

○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의결한 사항일지라도 상원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은 시행이 불가능

▣ 독일연방의회의원의 선거 제도

○ 독일의 선거제도는 연방제와 의원내각제 의회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현재 대통령 중심제하의 단방제 의회제도와는 성격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

○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는 옛 서독정부 수립 이후 만들어진 법들을 기초로 하며, 혼합선거제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1:1로 조화시키는 이색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투표방식도 유권자는 총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1표는 지역구후보에게, 다른 1표는 정당의 비례대표명부에 투표하게 됨

○ 독일식 비례제의 배분은 1차적으로 정당이 득표한 전국유효투표수에 의해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제정당명부후보자의 당선자를 정한 후 정당별로 할당하여 배분하면, 각 정당은 이를 다시 2차적으로 주별로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여 당선자가 확정되는 방식임

○ 이러한 독일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선거에서 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보다 정당을 우선하는 선거제도라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제도는 지역구의석을 많이 얻을수록 그만큼 비례대표의석이 감소하게 되는 의석배분방식으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독일 연방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국회가 구성되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비밀, 자유, 보통 선거가 보장됨

▣ 회의 운영 관련

○ 독일연방의회는 총 5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주에서 선거로 선출되어 온 지역구의원 299명과 나머지 비례대표의원 299명으로 구성됨

○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안들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져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심사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두 번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기간이 부여됨

○ 연방의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논의를 할 수 있음. 다만 EU 관련된 법안, 외교와 관련된 법안, 국가안보, 국민들이 원하는 관심 사안이나 불만사항, 예산 관련 법안 등은 무조건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테마를 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각 집행부서 즉, 외무부, 외교부, 법무부 등 각 부서에서 논의할 사안을 의회에 제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자기 부서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며, 가령 법무부가 관광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다른 부서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안건을 올릴 수 있음

○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요일은 보통 화요일이며, 이곳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히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됨. 각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업무는 법안 및 안건에 대한 조언 및 충고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게 되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부 직원들을 자리에 배치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음

▣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 독일은 조세수입의 차등적 분배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각 주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며, 또한 재정력이 상이한 각 주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제도를 보유

○ 독일 기본법은 연방 전체 지역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104조는 전체 경제의 균형유지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연방 지역 내에서의 상이한 경제력 조정을 위해 연방이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 독일 통일 이전에도, 구 서독 내에서 각 주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통일 이후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구 동독지역의 재건과 완결된 수준으로의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였음

□ 질의답변

◆ 국회의원 보좌관을 두는 방식 및 지원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주의원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 의원당 매달 2만 유로의 예산이 지급되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좌관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2만 유로를 사용하여 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 선거를 위해 고용하는 보좌관, 업무보좌를 위한 보좌관을 둘 수 있고, 의원 1명당 평균적으로 4명 정도의 보좌관을 두고 있음.

⇒ 즉, 보좌관은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의원 개인과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모두에게 2만 유로를 보전해주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가령 보좌관을 실제로 두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

에게 입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학사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1,000~3,000유로를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석·박사의 경우 4,000~7,000유로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2만 유로는 오로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 의원직은 4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의원직이 상실되면 보좌관도 자연스레 나가는 구조임.

⇒ 베를린 주의원도 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예산이 지급되기는 하나, 2만 유로보다는 적은 수준이며, 그들은 최대 2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1명 정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원사무실은 어떻게 되는지?

⇒ 모든 의원들이 2개의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선거를 위한 사무실, 나머지는 의정활동을 위한 개인 사무실이 있음

◆ 보통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베를린 중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는지?

⇒ 1년에 21~23주간의 국회기가 열리는데 이 시기에만 베를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음

◆ 회기 운영방식에 대해서?

⇒ 회기 전, 대부분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모여 회기 첫날 모두 국회에 참석하게 되고, 둘째 날은 어떤 법안이 제시되어 상정되었는지 논의를 하며, 수요일은 화요일에 상정된 경제문제 또는 외교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의견제시를 하게 됨. 총 24개의 분야로 구분된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므로 24개의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됨. 수요일 오전에는 독일연방총리와 대통령이 국회에 참여하여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충고하고 조언해주는 시간이 있음. 독일 대통령의 경우 토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정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등 회의 진행임무도 맡고 있음

◆ 지방의 주의회 의원이 독일연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지?

⇒ 독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자주 있음. 그 이유는 정치인으로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의회 의원으로 시작을 하거나 시장을 맡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경험을 바탕

으로 주의원을 하고, 이후 연방의원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임

◆ 독일의 시장 선출방식은?

⇒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의회가 시의원들 중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방식임

◆ 연방의회의 부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 크게 총 5개의 부서로 나뉘는데, 약 3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모든 부서의 가장 꼭대기에는 독일 대통령이 위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대통령직과 모든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2가지 역할을 담당함. 대통령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모든 부서의 책임자는 물론 따로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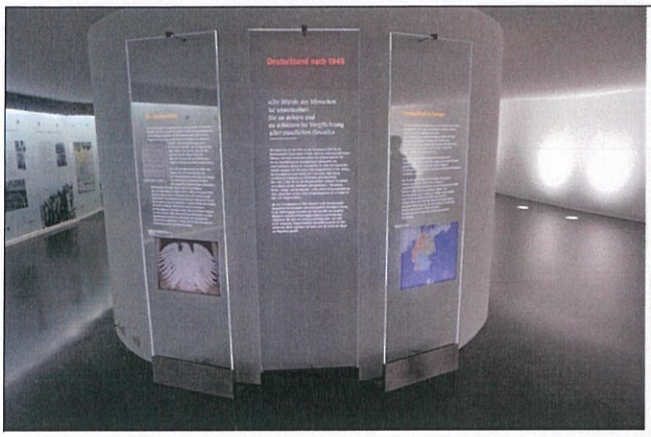
◆ 연방의회 내 PA라는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 PA는 의회에서 비서로서의 역할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음. 이 부서에 24개의 부서가 다시 존재함. 이러한 24개의 부서에는 총 194명이 근무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각 부서에 5~14명이 근무하고 있음. 국회에서 만들어진 각종 정보 자료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유하거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관련사진



□ 독일연방의회 청사 내부시설 견학










3 구 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청산재단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atur)

□ 방문개요

○ 방문일정 : '19. 8. 28.(수) 14:00

○ 주　　소 : Kronenstra Be 5, 10117 Berlin, Germany

○ 홈페이지 : http://www.bundesstiftung-aufarbeitung.de

○ 면 담 자 : 안나 카민스키 박사(독재청산재단 사무소장)

○ 기관개요 : 독재청산재단은 구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역사를 기록하고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독일의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

○ 면담주제 : 기관 설립목적 및 통일 이후 시대변화에 따른 재단의 역할 수행의 변화, 구 동독체제와 관련된 독재청산의 필요성, 독일통일과정에서 독재청산의 성과 및 실패 사례 등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으로서 전반적인 독재청산작업 실태 파악





SED 독재청산재단 시설 외부 전경



전라북도 대표단 환영 피켓

□ 연수내용[1)]

▣ 독재청산재단의 설립배경 및 역할

○ 1992년에서 1998년 사이에 독일 연방의회가 두 회기에 걸쳐 직권으로 설립한 두 조사위원회는 SED 독재역사와 이것이 독일 통일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SED 독재역사와 그로 인한 결과"를 다루었음

○ 1998년 6월 5일,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일 연방의회가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청산재단 설립법"을 제정하였음. 재단은 1998년 활동을 시작해 독일의 두 번째 독재에 대한 대중의 인식촉구와 계속되는 논의를 위하여 공공 자금지원을 받은 정보센터를 설립하였음

○ 독일 의회를 대표하는 다수의 당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재단은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와 이것이 독일 통일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접근법으로 공론화를 시도하였고, SED 독재와 관련한 학문과 개인적인 연구, 정치, 미디어, 공공 여론 등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45,000권의 도서와 특히 구동독 시기 금서로 지정된 반공산주의 문학 및 활동 기록을 모아놓은 기록소는 연구자들에게 사료를 제공하고, 1998년부터 재단은 독일과 중유럽, 동유럽에 걸쳐 이뤄진 2,000건 이상의 연구, 문서작업, 박람회 등에 2,600만불 이상을 후원하였음.

▣ 독재청산 재단의 구성

○ 재단의 수탁자위원회는 5년 임기로 선출된 16명의 인사들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재단의 핵심 의사결정을 수행함. 이들은 당을 대표하는 독일 의회 의원들, 독일 연방과 베를린 시에서 임명된 사람들, 그리고 독일연방의회에 의해 임명되는 5명의 SED 독재문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음. 수탁자위원회의 의장은 독일 의회의 Hartmut Koschyk 부회장인 마르쿠스 메킬이 임명되었고, 위원회는 재단의 전반적인 목표와 활동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함. 명예직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재단의 더욱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관장하는데, 총 5명의 이사로 구성

1) 독재청산재단 "통일 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 자료 참고

되며, 이사회는 학술자문위원회, 사회 재평가 자문위원회, 고문서 및 기록발행 자문위원회의 지원과 자문을 받고, 세 위원회는 총 3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단의 사무소는 이번 정책연수 면담자인 안나 카민스키 박사가 주축이 되어 현재 22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프로젝트 후원, 장학금 배당, 컨퍼런스와 행사 조직 등과 같은 재단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음. 재단 사무소는 SED 독재 역사와 그 결과를 조사, 문서화, 연구 등으로 발표하는 독일 내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며, 이와 더불어 심화 연구에 관련한 정보와 조언도 제공하는 한편, 대중인식 개선과 동독 독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음

▣ 업무 및 활동범위

○ 독재청산재단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1945년부터 1989년 사이의 동독 사회주의 독재의 기원과 발생원인, 역사와 그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 연구에 기여해왔음. 재단의 목표는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① SED 정권의 불법 행위에 증거 확보 및 피해자 파악, ② 독일 내 반 전체주의 여론 확산, ③ 민주주의와 독일 통일 강화라고 할 수 있음

SED 독재청산재단의 설립목표

1. 동독의 사회, 개인 정보, 피해자 단체, 학술 연구 및 정치교육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지원
2. SED 독재에 저항한 자료를 보존, 수집 및 문서화시키는데 기여
3. 정치적 박해를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심리적, 법률적 지원
4. 독재 재평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
5. 자체 간행물 출판과 행사를 통환 공론화
6. 상과 장학금 수여

○ 재단은 현재 독일 의회의 의결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760만 달러를 연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재단이 가진 1억 2천만 달러의 기금은 대부분

과거 동독 공산당 SED의 자산을 독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인계받은 것임

▣ 재단의 성과

○ 1998년 재단 설립 이후 2,200회가 넘는 전시회 개최, 출판물 발행, 컨퍼러스, 워크샵,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통해 독재청산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고, 3,100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75건이 넘는 학술논문 장학금을 수여하였음. 45,000권 이상의 장서와 40,000부 정도의 미 출간된 지하문학의 사본, 40,000장의 사진과 3,700개의 예술 작품들을 소장한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를 구축하였음

○ 독일 내 800개에 이르는 공산주의 독재를 기록하고 알리는 크고 작은 기념원에 대한 문서들을 수집·제작하고 발행하는데 힘써 왔으며, 또한 과거 공산주의권에서 일어났던 소련의 대공포시대(1930년대 스탈린이 주도한 대숙청),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의 홀로도모르, 프라하의 봄(1986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 옛 소련군 침공으로 좌절), 1956년에 일어난 헝가리 봉기 등 다른 국가에서 자행된 사건들에 대한 특별 자료들도 발간하였음. 현재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기관들과 제휴를 맺어 활동해오고 있음

과거 동독 독재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시민들의 용기와 저항의 행동을 기념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 통일 독일의 역사적배경 및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

○ 20세기 독일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간 파시스트나치(제3제국) 독재역사와 더불어 1949년부터 1989년에 걸친 동독 공산주의 독재역사를 경험하였음

* 1945년 소련군의 동독과 동베를린 지역 점령이래로 동독의 독재체제 구축

○ 이와 같은 두 독재기간은 구조적 요소간의 공통점들을 가지는 동시에 시작과 몰락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임. 나치 독일은 세계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고, 유럽 내 유대인 대량학살을 자행하며 독재정권을 이어갔음. 이 두 독재체제로 인해 발생한 범죄들은 그 성격과 지정학적 범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나치의 몰락과 유럽 내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후,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소련

군대는 동독 나치 수용소를 10개의 특별수용소로 활용해 민족-사회주의자로 여겨지는 이들을 무차별 감금하였음. 그 중 35%에 이르는 43,000명이 수용소에서 희생되었음

○ 1945년과 1989년 이후 국내외적인 큰 변화 가운데서 독일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두 독재를 정의해왔음. 그 사이 두 독재체제의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의 서로 다른 경험은 독일 공적 담론의 통합적인 주제가 되었음. 그 결과 **과거의 독재체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합의로 수렴되었고, 이는 독재체재 하에서 자행된 다양한 불의를 규정하는 과정에 있어 독재 사후까지 이어진 독재유산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사회주의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지역의 독일 주민들은 1933년부터 1945년, 1945년부터 1989년까지 두 번에 걸쳐 지속된 서로 다른 두 독재체제에서 살아가며 두 독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경험하였음.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은 1949년 10월 7일, 소비에트 연방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던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내 독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국민적 합의 없이 수립되었고, 40년 이상의 동독 독재기간 동안 250,000명이 넘는 동독 주민들이 정치범으로 억압받았음

○ 사회주의 통일당은 표면상의 민주주의 제도 기관들을 설립한 후 자의적인 권력에 따라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여러 해에 걸쳐 사회주의 제도 하에 동독 주민들은 여러 분야에서의 억압을 경험해야만 했고, 전후 초기에는 정치 반대세력 또는 상대 진영들이 언제라도 당파정의를 기초로 한 형사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압과 임의적인 체포를 당하였음. 사법제도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정치적 지배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1945년부터 1989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250,000명의 주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당하였음

※ 1961년부터 1989년까지 30,000명의 주민들이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치른 배상금을 통해 서독으로 석방되었음

○ 수천명의 사람들이 1945년 이후와 1950년대에 걸쳐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시베리아 수용소로 추방당하였음. 1961년 8월까지만 300만이 넘는 동독 주민들이 열린 국경(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을 통하여 서독으로 탈출하였음. 이로써 세계 2차 대전 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피난민 이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1953년 6월 동독의 대규모 폭동과 소비에트의 강경진압, 1956년 헝가리 투쟁의 좌절과 동독 내의 억압적인 조치, 1961년 8월 베를린 국경을 두르는 베를린 장벽 건설과 그로 인한 1,700만 명 독일 민주공화국 국민들과 서독에 있는 가족들간의 분리, 1986년 체코에서 일어난 바르샤바 조약에 대한 군사개입, 그리고 1981년 폴란드 자유노동조합 및 농부연대운동에 대한 계엄 진압 등 비극적인 경험들이 발생하였음. 이 모든 사건들은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국민들과 동부 유럽인이 독재정권에 맞서 공민권과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소비에트가 독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분단을 지속하는 동안 동독 공산 정권은 집권을 계속하였음. 1989년 말에 이르러서야 소비에트 연방은 공산주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을 철회하였음. 이와 동시에 많은 동독 주민들은 헝가리와 체코를 통하여 서독으로 이주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동독 이탈현상 물결은 마침내 내부적 불안들이 팽배했던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체제를 무너뜨리게 됨. 대규모이면서 지속적인 평화시위들이 작은 시골 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일어났던 것임.

○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난 거대한 시위를 전환점으로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으며 국경 봉쇄도 동시에 풀렸음. "우리는 같은 독일 국민이다.**(We are the people)'"라는 슬로건을 건 '평화적 혁명'은 사회주의 체제를 서서히 해체하였고, 여러 정당이 설립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리하여 동독은 시민혁명을 통한 해방운동 이후 자주 민주화가 진행되었음

○ 1990년 3월 18일 자유선거 결과 서독 연방 공화국과의 급진적 통일을 옹호하는 동독정당이 압도적인 득표 차로 승리하였음. 그 후 혁명 초기 때부터 사용되던 "우리도 같은 독일 국민이다.(We are the people)" 슬로건은 **"우리도 하나의 통일된 통일 국민이다.**(We are one people)"로 변경되었음

○ 뒤 이어 1990년 7월 1일 동서독 정부 대표들이 모여 통화, 경제, 사회통합이 합의되어 사회, 경제통합이 실현되었으며, 1990년 8월 31일 법적, 정치적 체제 단일화를 위한 통일 조약이 체결되었음. 다자간 및 양자 토의 후 제2차 세계

대전의 승리를 거둔 연합군(소비에트 연방, 미국, 영국, 프랑스)은 자유선거로 선출된 동독 정부와 서독이 함께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다가오는 독일 통일을 위해 '2+4'협정'을 맺고 통일 독일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군사 동맹의 일원으로 인정하였음. 더불어 유럽냉전 당시 동독지역에 주둔한 400,000명의 소련군들은 1994년까지 구동독에서 철수하게 되었음

○ 1991년 통일된 베를린은 독일 의회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마침내 1999년 통일 독일 연방정부의 수도가 되었음.

○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동독의 역사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통일 독일의 주된 담론이 되었음. 이와 관련해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서독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동독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들이 나섰음.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들은 용기 있는 개인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음. 이러한 활동은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 동독의 최종 집권기간과 독일의 공식 통일 전에 계속해서 일어났음

○ 가해자에 대한 형사법,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록 공개 등 구체적인 민주화 작업에 있어 중요한 결정은 1990년 3월 선거 후 과거 동독 정부로부터 시작되었음. 그 후에 통일 독일 연방의회와 새롭게 창설된 동독의 5개 주가 이끄는 정치세력은 동독 정권 당시 자행했던 부정부패와 탄압, 압제 등에 관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진상조사와 배상문제들을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음. 시민들의 혁명과 반대 및 저항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연구와 과거 독재에 관한 구조 및 방법에 대한 정보 수집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1990년 이래로 **모든 독일 연방정부와 의회는 사회주의 독재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해왔음. 연방정부와 언론, 시민 사회는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의 쇠퇴와 함께 밝혀진 다양한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통일 독일이 1990년 이후로 전개한 동독 사회주의 독재정권에 대한 조사와 진상 파악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앞선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꼽히고 있음.**

○ 대학들과 각종 연구 단체의 연구자들은 동독 독재시절의 진실들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주제들과 지식들을 발견해왔음. 1990년 이후로 2,000건이 넘는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연구주제는 탄압과 정치적 박해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독일 역사의 중심 주제가 되었음

▣ 동독 비밀경찰 기록확보와 문서공개

○ 슈타지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의 비밀경찰로 1989년을 기준으로 95,000명의 공식요원들과 180,000여명 되는 비공식 요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40여년간 동독 주민들의 모든 활동을 감시해왔음. 이러한 **슈타지 문서에 대한 보존 노력이 있어 이후 개개인이 저지른 부정에 대한 중요한 도구와 근거들을 제공**함으로써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과거를 평가하는 작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와 같이 슈타지 문서의 확보는 1990년대 독일의 과도기적 사법집행의 큰 축이 되었던 것임

□ 브리핑 내용 및 질의답변

▣ 브리핑 내용

○ 재단에서 실시하는 업무는 과거 공산주의 시대인 나치시대부터 분단시기의 동독에서 있었던 독재정치와 관련하여 어떤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로 현실적인 역사를 찾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리고 독재청산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후세대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치당이나, 구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이 어떠한 일들을 벌였고, 없어지게 되었는지를 알리고, 공산주의와 독재정치에 대해 낱낱이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것인지 민간인들에게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로 하는 업무가 독재정치의 현실을 낱낱이 밝힘으로서 사람들이 스스로 독재정치에 대한 위험함과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것임

○ 현재 독일에 사는 젊은 층들은 독일이란 나라가 예전에 2개의 국가로 나누어 졌다는 것과 그 국가 중 하나는 독재정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현재 독일의 현실로 학생들에게 독재정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험한 것인지 전파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이렇게 젊은 학생들은 처음에 이런 독재나 사회주의 정책을 구두로 설명해 보았자 민감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친숙하고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독재청산재단과 tv방송국이 협업을 통해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책자를 대여해 감으로써 수업내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리고 청소년 신문, 아이들 신문을 매달 5만부씩 발행하여 학교에 비치함으로써 관심 있는 아이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음. 또한 독재청산재단에서는 여러 기관 및 국가들과 각각의 테마를 만들어 많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가령 독일이 통일되기 전 사람들이 데모를 통하여 기자회견을 이끌어내고, 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 **감정의 힘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테마로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를 한국으로 보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전시회가 열렸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오고 있음

○ 재단은 구동독이 무너진 이후, 무슨 일이 발생하였고, 동서독이 어떻게 같이 성장을 해나갔으며, 성장해가면서 어떠한 난관이 있었는지에 대한 장단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통일 30주년이 되어가는 지금 베를린에는 베를린 장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물론 철거도 많이 했지만 남아있던 장벽들을 세계 각국에 평화의 상징으로 선물을 많이 하고 있으며, 한국의 서울 및 제주에도 베를린장벽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관련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음

○ 독일 국회를 통해 재단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흘렀는데, 재차 강조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은 과거에 독재정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잊지 말자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임

▣ 질의답변

◆ 재단 직원들의 구성은 어떠한지?

⇒ 연방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계약을 맺어 일자리를 받은 25명의 계약직 직원(공무원이 아님)이 있고, 2~3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 20명이 있어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의 급여는 연방정부에서 회의를 통해 재단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안건을 올려 허가를 받으면 급여가 결정되고 있음. 이곳에는 총 6개의 부서가 있는데, ① 역사적 자료를 모은 도서관, ② 학문 관련 연구 부서, ③ 다른 기관과 연합을 통해 협력하는 부서, ④ 교육을 위해 학교 등을 방문하여 강연을 하거나 교육 자료를 만드는 부서. ⑤ 영상을 만드는 부서. ⑥ 전시를 하는 부서 등이 존재함

◆ 독재가 곧 공산주의는 아닌데, 이곳에서 생각하는 독재는 무엇인지?

⇒ 물론 독재가 공산주의는 아님. 이곳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독재는 나치시대의 독재, 두 번째는 구동독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독재정권임.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비슷한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구동독의 경우 사회주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독재를 사회주의로 연결시키게 되어 사회주의의 개념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곧 독재정권이고,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독재주의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북한과 같은 군사적 독재체제이며, 독일은 사회주의적인 독재체제로 분류되고 있음

◆ 동독 치하에서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박해로 살해하거나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동독정권하에서 정치적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었는지?

⇒ 초반에만 사형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수감하였는데, 통일 이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죄의 행위시로부터 15년으로 정함으로써 실제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35명밖에 되지 않았음.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그 죄가 밝혀지고 난 이후를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두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청산의 의미가 지우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이면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독일에서는 혹시 옛날 나치나 구 동독정권을 동조하거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 그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시절의 향수'라고 표현함. 통일이 된 직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정말 심한 편이었는데,서독에서는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며 잘 살지 못하는 동독 사람들을 데리고 살기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였고, 동독에서는 주로 권력층과 구 동독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일자리가 보장되던 사람들이 새로운 경쟁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 향수를 느끼곤 하였음

⇒ 한편, 나치시대의 경우에는 현재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향수를 느끼는 사람이 없으나 나치가 사라진 바로 직후에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나치시대가 좋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나치시대를 그리워한 사람이 많았음. 당시 그러한 사람들은 나치시대의 사상이나 시스템은 이상적이었으나, 당시 권력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시스템을 잘못 운용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재단에서 제작한 책자를 다시 개정할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일 기자 "위르겐힌츠페터"가 세계에 알렸던, 남한에서 발생한 5. 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서도 책 내용에 포함시켜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재단에서 만든 책자에는 공산주의적인 독재만 실어놓았기 때문에 남한에서 발생한 독재 관련 내용은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앞으로는 재단에서 군사적인 독재체제에 대한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그 책에는 남미·스페인·남아프리카·타이완에 있었던 독재체제 관련 내용을 담을 생각이며, 물론 남한에서 있었던 독재체제에 관해서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독일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진 직후, 정부차원에서 독재청산재단을 설립하여 구 동독 독재체제하에서 존재해 왔던 문제들에 대한 청산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며 독립이 이루어진 후에, 친일반민족자에 대한 처벌 및 재산몰수 등 청산절차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과오가 있음.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라도 독재청산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나갈지 등에 대해 미리미리 고민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이번 방문으로 독재청산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후세대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과거에 독재정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잊지 말자는 것을 일깨우고, 잘못된 공산주의와 독재정치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교육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정책의 중요성이 큼을 알 수 있었음

□ 시설내부 사진



독재청산재단 내 비치된 관련 자료들

□ 면담 사진





information
information


DIE MACHT DER GEFÜHLE
ANGST
BEGEISTERUNG
EXCEL


DIE MACHT DER GEFÜHLE
ANGST
BEGEISTERUNG
EXCEL

4 독일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방문개요

○ 방문일정 : '19. 8. 29.(목) 09:30

○ 주　　소 : Friedrichstr. 50 10117 Berlin, Germany

○ 홈페이지 : http://www.bpb.de

○ 면 담 자 : 게흐너볼프만 교수

○ 기관개요 : 독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원리들을 교육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다시 건립되지 못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중에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 국민들에게 상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원활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면담주제 : 정치교육원의 설립목적 및 역할 등 운영형태, 동서독 주민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및 통일교육 체계와 한반도 통일 이후 민주 시민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통합방향, 독일의 연방제 등 정치제도의 개요와 이러한 제도가 독일 통일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논의

□ 연수내용

▣ 정치교육원 예산 및 가치관

○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정부로부터 100% 지원금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독일 내 행정 관리 부서의 산하기관임.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적 색깔을 지니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연방정부 소속에 있으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정말 힘든 일임에도 이러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 이 곳 교육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별도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원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이곳의 총 예산은 8,000만 유로정도로 독일에 있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독일의 어떤 정치교육원보다 예산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렇게 독일연방정부에서 정치교육원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독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독일 역사상 존재했던 히틀러와 구 동독의 역사를 후세대에게 반드시 일깨워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임

▣ 정치교육원 설립 배경

○ 현재 독일은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지만 그 역사는 길지 않은 편임. 독일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던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바이마르공화국으로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은 경제적 문제와 내부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많은 내부분열이 발생하였으며, 돌이켜봤을 때 가장 큰 실수는 선거에 의해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당선되었다는 것임. 당시 1933년도의 선거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2명 모두가 사회주의자였을 정도로 바이마르공화국이 추구하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인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그 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독이 나뉜 상황에서 승전국의 하나인 미국이 서독에 자유민주주의를 깊게 뿌리내리면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기관이 바로 정치교육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952년 서독의 예전 수도였던 본(Bonn)에 정치교육원이 설립되었음

▣ 정치교육원 방침 및 기본방향

○ 최초 정치교육원이 출범하였을 당시에는 정치적 색깔을 중립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반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기관이었으며, 또한 서독의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에서의 구 동독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반대를 통해 정치적 싸움을 이어갔음. 이러한 생각들이 변하게 된 것이 1970년도부터 정치교육에 관해서 만큼은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이고, 이렇게 수립된 규칙들이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교육원의 방침 중 하나가 남에게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의 정치적 이념을 수용하여 자신만의 정치적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즉, 남을 비난·비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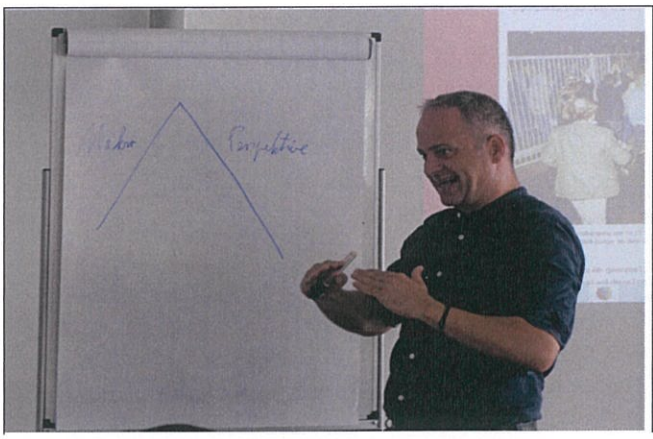
- 이러한 정치적 논의는 교수, 박사 등 학력이 높은 사람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Key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음

○ 교육원의 입장에서 정말 어려웠던 과제 중 하나가 구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을 당시로 통일된 독일에서 구 동독 독재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음. 민주주의에 어떠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있으며,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임. 그래서 이 곳 정치교육원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원의 홈페이지에는 1995년~2012년까지 동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하였는지, 동서독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어떠하며 빈부격차 및 봉급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으며, 독재정권에 적응해 온 구 동독사람들을 어떻게 개인화시키고, 능동적 마인드를 형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마코 프로스펙(marco prospect) 마이크로 프로스펙트(micro prospect)

○ 독일의 대학에서 흔히 통일에 대해 논의할 때 '마코프로스펙트'와 '마이크로스펙트'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음





- '마코프로스펙트'는 통일이 실현되면 모든 동독사람들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기뻐하고,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 반면 '마이크로프로스펙트'는 통일이 되었을 당시 작은 그룹들이 통일에 반대를 하고, 또 통일을 통해 많은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있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을 일컫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 예를 들어 구 동독 체제 내에 있었던 유태인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성소수자들은 구 동독 시절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이후 재건축을 도와주었던 구 동독시절 베트남인들은 통일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사회주의 국가와 관련하여 서베를린에 거주했던 터키 사람들은 통일 전후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마지막으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당시 길거리에서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당시 무엇을 했고, 심적으로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안들이지만 이러한 작은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깨우쳐야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구 동독체제 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과 영화상영으로 동독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러한 사실들이 독일 통일에도 일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 또한 '마이크로프로스펙트'의 일환이라고 할 것임

- 또한 독일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 데에는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구 동독 시절 강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러한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환경도서관"이라는 책을 통해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하였음

○ 방문 당시 면담자인 게호너볼프만 씨는 현재 독일의 초·중등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 물어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데모하다가 장벽이 무너지고, 환호성을 외치면서 통일이 되었다."고 답변이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마코프로스펙트'로서 사실이긴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마코프로

스펙트보다'는 '마이크로프로스펙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하며 이것을 통해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따라서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북한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그러한 그룹 내에서도 개개인의 작은 그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며, 어떻게 그들을 움직여야 통일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그리고 만일 남북한이 통일이 된 직후에는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겠으나, 4~5년 후, 이러한 감정들은 곧 사그라들게 될 것이며, 독재체제에서 생활을 영유해오던 사람들도 그들만의 관습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통일된 국가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동서독 통일 이후에 동독 사람들이 받았던 좋지 않은 처우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개인을 존중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질의답변

◆ 동·서독의 초·중·고 교육 시스템이 달라 통일 이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 분야에 있어 통합을 어떻게 잘 이루어내었는지?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 구 동독시절의 예를 들면 동독 초등학교 1학년이 정치에 관한 서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서독학생들보다 훨씬 똑똑한 편이었음. 그 이유는 동독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정치교육을 강하게 시켜왔기 때문이며, 이렇게 구 동독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매우 발달하였음

⇒ 연방주의인 독일의 경우 연방주마다 교육법이 달랐고, 구 동독 도시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교육 방식이 존재하여 통일 이후에는 자기 지역의 교육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독의 교육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통합해 나갔음.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것에 대한 습득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문제는 구 동독시절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가르치던 교육방식이 확립되어 있어 나이가 있는 교사들은 직업을 잃게 되었고, 젊은 교사들은 어떻게든 교육방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이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현재 통일이 된 지 3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동독의 도시만 직접 확인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예전의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던 모습들이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도 동·서독 출신 사람들의 구별이 가능할 정도인데,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양쪽의 체제가 서로 달랐고, 동·서독에 각각 국회의원, 주·시의원 등 지방의원이 있었을 텐데, 통일 이후 통합하여 선출할 때 많은 현상이 나타났는지?

⇒ 연방선거의 경우를 말하자면, 통일 이후 기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SED라는 구 동독체제를 지지하는 당들이 후속적으로 생겨났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을 이루는데 역할을 한 기민당에 투표를 하는 추세였고, 동독의 슈타지, 기득권층, SED 후속당은 몰패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현재 독일 장관 등 고위 관직은 동·서독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 국가의 주요 직책들의 경우 서독 출신이 많은지 동독 출신이 많은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잘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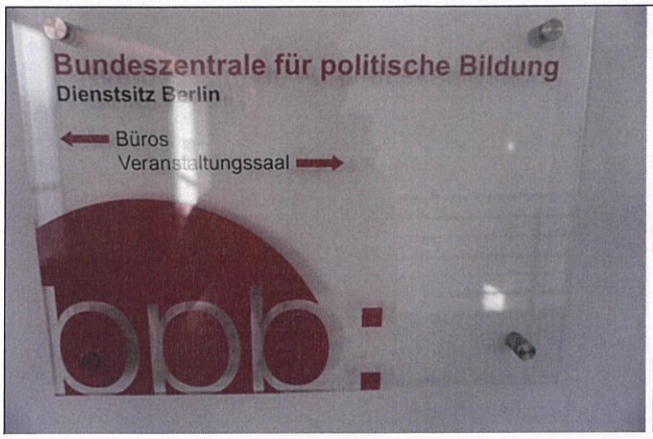
지역선거의 경우 서독지역에서 동독 정치인들로 구성된 캠프를 꾸려서는 당선 확률이 전혀 없고, 반대로 동독지역에서 서독 정치인들로 구성된 캠프를 꾸려서도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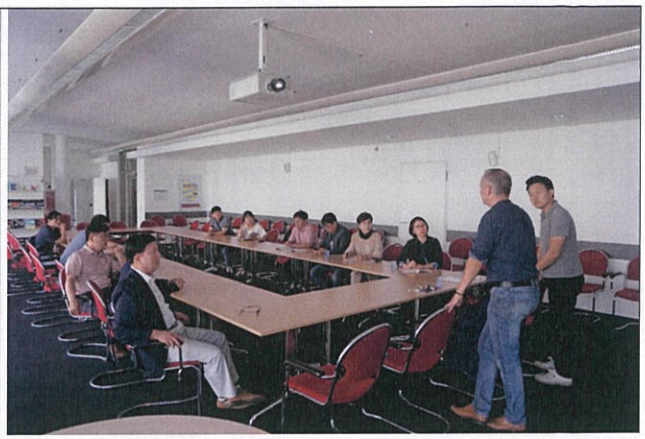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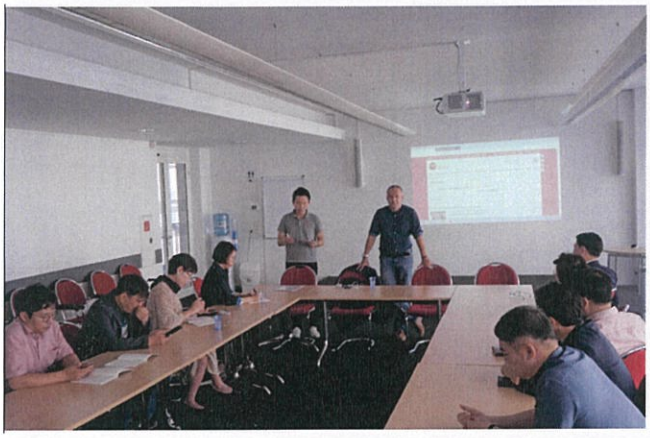
○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국민에게 정치교육의 중요성과 제반 국가정책을 이해시키고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참여도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한 목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초정파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상이한 정당에 소속된 22명의 연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감독기관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를 받는 등 철저히 교육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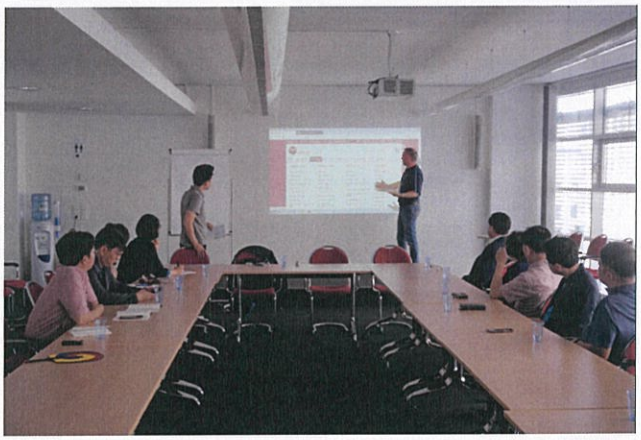
○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정당재단, 인가된 교육기관 및 단체를 학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정치적인 논의는 큰 틀에서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큰 사실들(marco prospect)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 사안들(micro prospect)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관련사진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Dienstsitz Berlin
Büros
Veranstaltungssaal
bpb:















5 호른베이크 직업학교 (Hoornbeeck colleage Amersfoort Campus)

□ 방문개요

○ 방문일정 : '19. 8. 30.(금) 15:00

○ 주　　소 : Utrechtseweg 230, 3818 ET Amersfoort, Nederland

○ 홈페이지 : https://www.hoornbeeck.nl/

○ 면 담 자 : 리컬트 베이절스 직업학교장 등 관계자

○ 기관개요 : 학생 및 여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네덜란드 직업전문학교

○ 면담주제 : 네덜란드의 선진 평생학습정책 방향과 운영체계, 호른비크 직업학교에서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시스템의 종류와 성과





□ 연수내용

▣ 학교의 가치관 및 교육방침

○ 네덜란드 호른베이크 직업학교는 유명한 17세기 신학자 요하네스 호른베이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현대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음. 수년간 네덜란드 최고의 직업교육학교로 중·고등학교에서 노동 시장으로 이어지는 다리로서 일련의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전문적인 경력을 준비시키고 있음

○ 이 학교는 1997년도에 기존에 있던 두 학교를 통합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네덜란드 개혁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유일한 학교로 Hoornbeeck College의 6개 캠퍼스를 다니는 총 학생의 수는 7,000명 정도임

○ Hoornbeeck College는 **"각 학생들이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가치관으로 학생, 교사 및 직원이 서로 헌신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좋은 대화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로 지원을 하며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눌 공간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음

○ 이 학교는 전문 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데 **지역의 전문 회사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상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강사진과 경영진은 기업가적인 성향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시도하는 한편, 훈련 과정 자체가 작업 분야와 일치하고 있음. 또한 회사 및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직업 태도, 윤리, 지식 및 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결과적으로 Hoornbeeck 학생들을 노동 시장에 잘 진입하게 하고,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회사와 기관은 Hoornbeeck College 인턴 및 졸업생을 환영하면서 직업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교육시스템

○ 네덜란드의 기본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4세부터 12세까지는 초등학교 과정을 학습하고, 이러한 과정 이후에는 시험을 통해 4년, 5년, 6년제 학교로 나누어서 진학을 실시하게 됨. 즉,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재학 기간만 4,5,6년제로 구분되는 것임.

○ 재학기간에 따른 교육형태는 4년제의 경우 직업교육 위주로 수업을 실시하고, 6년제는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을, 그리고 5년제는 4년제와 6년제의 중간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Hoornbeeck 직업학교는 4년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MBO(중등 직업 교육)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직업위주의 교육임. 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등급(Level)은 2~4

Level까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2 Level은 기초교육, 3 Level은 고급교육, 4 Level은 최고급교육을 일컬음. 4 Level을 학습한 상태에서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같은 직장 내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서 근무할 수 있을 만큼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음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의 중등 직업 교육 (MBO) 수준

1 단계 : 복잡하지 않은 행정 업무를 위한 입학 프로그램 또는 보조 교육 (1년)
2 단계 : 실무를 위한 기본 직업 프로그램 (1~2년)
3 단계 : 임원직 (2~3년) 자영업 전문가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4 단계 : 광범위한 고용 가능성 (3~4년)을 가진 완전 자영업 임원 업무를 위한 중간 관리 프로그램

▣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의 성격과 특징

○ 호른베이크 학교는 개혁학교이자 기독교 학교로, 그 교육의 바탕은 성경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학생들을 최대한 집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또 한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조금 약하다고 표현되는 학생들, 즉,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기타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욱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음

* 네덜란드에는 기독교형태의 여러 학교가 많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이 곳 호른베이크 학교의 경우에만 여학생들이 치마를 꼭 입고 수업을 받아야 하며, 바지를 입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음

○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3가지로 첫 번째가 아이들의 미래, 두 번째가 사회에 유능한 전문가를 보내는 것,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를 기본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성인교육까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신들의 직원들을 기술적으로 훈련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해주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단계로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 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재시험을 통해 공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를 이러한 훈련을 시켜주고 있음

○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에 사회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문제이고, 특히 의학 관련 분야에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간호사로 재직하다가 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주면 그들에게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사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렇게 상생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의 교육방법

○ 호른베이크 학교의 교육방법은 다양한 데, 첫 번째는 BOL이라는 Full-Time 교육이 있음. 이 방식은 일주일에 5번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듣는 형태로, 현장학습 및 실습을 병행하는 것인데, 가령 4년제 과정을 거칠 경우 두 번 정도는 6개월 동안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두 번째로 BBL이라는 교육시스템이 있는데, BOL과는 달리 Part-Time 교육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 4일은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해보면서 학습하는 교육시스템임. 이러한 수업교육은 이 곳 학생들이 16~17세부터 입학하기 때문에 학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학생들을 위해 실시하는 차원의 교육시스템임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의 2가지 교육방식

▣ **BOL** : 직업 교육 학습 경로 (BeroepsOpleidende Leerweg; BOL)는 일주일에 5일 학교에 가는 정규 프로그램임

▣ **BBL** : 학교 기반 학습 통로 (BeroepsBegeleidende Leerweg; BBL)는 일주일에 하루 학교에 가고 다른 날에는 공인 교육 회사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시간제 프로그램임

○ 이 외에 새로운 프로젝트 차원에서 최근 도입한 교육 방법은 **이 지역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과 협력을 통해 기업 직원들을 학생으로 받아 이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형식**으로 그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과 기계들은 회사에서 제공을 해줌. 결국 회사에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주는

대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는 방식임

▣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의 규모 및 학과 구성

○ 호른베이크 직업학교는 본 캠퍼스인 이곳 아메르스포르트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아메르스포르트 캠퍼스가 제일 큰 학교로 2,400명 정도 재학하고 있음. 다만 평균적으로 하루에는 1,800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학생들은 실습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기 때문임

○ 이곳은 크게 5개 학과로 나누어지는데, ① 비지니스 관련 경제학, ② 간호사 교육, ③ 사회복지 관련 학과, ④ 서비스 분야 학과, ⑤ ICT 또는 컴퓨터 관련 기술 학과로 구분되고, 총 9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그 중 간호사 교육은 노인담당 또는 유아 담당 등 한 개의 분야를 정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기술교육의 경우, ICT, 건축, 바이크, 모빌리티(트럭 등 차량) 수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호른베이크 직업학교는 수업을 할 때에 학생들의 정체성과 교육의 품질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방식을 통해 10년 연속 네덜란드의 40개 직업교육학교 중에서 1등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함

▣ 참고(네덜란드의 에너지 절약정책 관련)

○ 네덜란드는 에너지 운영과 관련하여 가스를 최대한 태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네덜란드 정부 차원에서 2030년에는 더 이상 가스를 태워서는 안 된다는 법이 시행되어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의 건물은 100년이 넘었음에도 건물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여 2,000개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후에는 에너지 사용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호른베이크 학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처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추구함. 그리하여 교육에도 지속 가능성을 포함 시키는데, 회사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의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태도로 교육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질의답변

◆ 정부에서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 네덜란드는 대부분 정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Full-Time 교육의 경우에는 100%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Part-Time 교육의 경우 4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 등 교통비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음. 한편, 18세 이상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1년에 1,000유로 정도를 학교에 납부하고 있음.

◆ 호른베이크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는 편인지?

⇒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은 직장을 바로 구할 수 있음. 거의 98%정도가 졸업하면 바로 직업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네덜란드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에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부족, 조금 더 부족, 많이 부족으로 구분될 정도로 모든 분야에 있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노인복지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분야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편인지?

⇒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로 노인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행히 학생들이 노인복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음

◆ 6년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 우리 학교는 4~6년제로 이루어지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4년제 50%, 5년제 30%, 6년제가 나머지 20%정도로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됨

◆ 6년제를 다니는 20%의 학생들 중 어느 정도나 대학에 진학을 하는지?

⇒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6년제를 마친 학생들 중 3분의 2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그 중에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신의 자녀가 직업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부모들의 편견이 존재하는지?

⇒ 네덜란드의 부모들도 다른 국가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생각하는 마인드 중의 하나가 바로 "무슨 직업이든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임. 예를 들어 내 차가 망가지면 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차수리공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임. 따라서 자녀들이 MBO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이 학교에 재학이 가능한지?

⇒ 우리 학교가 기독교적인 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곳을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임. 네덜란드에서는 학교 특성과 이미지에 맞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 그럼에도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단계 중에 Level 2라는 기초교육반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도 수업을 받을 수 있음

◆ 간호사들이 경력단절 이후에 이곳에서 재교육을 받고, 또 변화되는 사회에서 컴퓨터 관련 재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지?

⇒ 그러한 교육은 일반 학생들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며, 프로젝트 반이 따로 있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경력단절 이후 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취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교육대상에 연령제한이 있는 것인지?

⇒ 연령제한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분야 등의 경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간호사 또는 컴퓨터 관련 분야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면 아무래도 취직이 수월한 편임.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러한 재교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가령 기업에서 컴퓨터에 재능을 보이는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고급고육을 요청하면 그 분야에 있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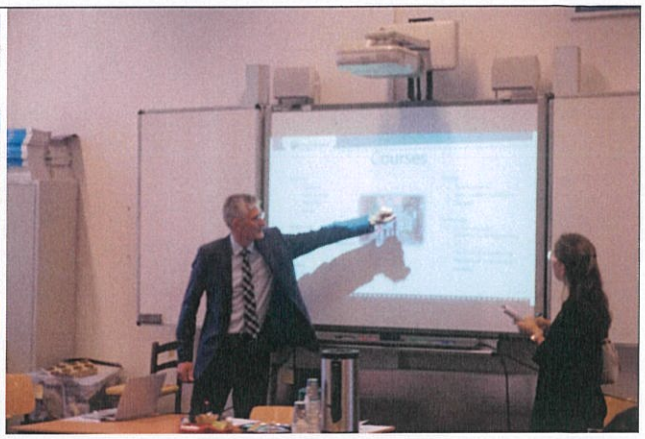
○ 네덜란드의 직업학교는 지역의 전문 회사 또는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노동 시장에 잘 진입하게 하고,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우리 전북도 이렇게 학생들과 기업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결해줌으로써 회사와 취업준비생들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필요성이 있음

○ 호른베이크 학교에서 최근 새롭게 도입한 프로젝트 중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업 직원들을 학생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품과 기계 등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은 매우 창의적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서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센터 또는 평생교육기관 내에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력단절이 된 간호사 등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교육방식을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에서 최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음. 우리 전라북도도 도내 경력단절 여성 및 다양한 전문 경력자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및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방문면담 사진




Cour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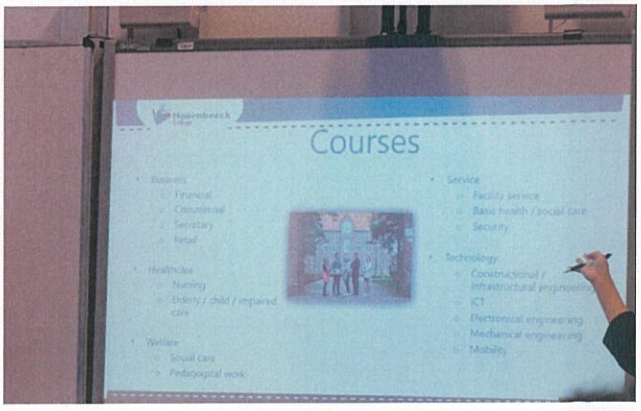



Reforme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ourses

□ 학교시설 견학 사진(예배당, 강당, 실습실 등)











6 이준열사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 방문개요

○ 방문일정 : '19. 8. 31.(토) 10:00

○ 주　　소 : genstraat 124, 2512 BA Den Haag, Nederland

○ 홈페이지 : http://www.yijunpeacemuseum.org

○ 면 담 자 : 이준 열사 기념관 송창주 관장님

○ 기관개요 :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이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907년 7월 14일 병사한 곳을 기념하여 지은 기념관으로 1995년 8월 5일 개관하였음

○ 방문목적 : 유럽에 하나 밖에 없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인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식민제국주의에 항거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신 이준 열사의 정의와 평화정신을 기리고 애국심 고취



□ 기념관 설립목적 및 역사

○ 이준열사기념관은 1995년 8월 5일 개관하였으며, 설립목적은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민족후대와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 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삼기 위함임

○ 이준열사기념관은 유럽에 하나밖에 없는 항일독립유적지로서 이 집은 1907년 7월 14일 이준열사가 순국하신 역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준 열사께서는 그 당시 헤이그에서 개최중인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종 두분과 함께 한국대표로 이곳에 오셨으며, 세 분은 그 당시 "HOTEL DE JONG"이던 이 집에 머무시면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애쓰셨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냉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

○ 이에 의분을 못이기신 이준열사께서는 [왜, 대한제국을 제외시키는가?!...]란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집에서 장렬하게 순국하여 식민제국주의에 항거하고, 한국민의 기개를 세계에 알렸던 것임

□ 시사점

○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는 광복 5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88주기를 기념하여 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1995년 8월 5일 이준열사기념관을 개관하였음

○ 헤이그 특사 100주년과 열사의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의 지원으로 전시실을 보완하고, 2007년 7월 14일 재개관하였음

○ 2012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체결된 지 107년주년이 되는 날을 기하여 "잊지 말자 을사늑약", "Never Forget, Never Again!" 캠페

인을 개최해오고 있음

○ 오늘날 우리 민족은 치욕의 을사늑약을 차차 잊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문제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 역사왜곡을 넘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등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만행을 벌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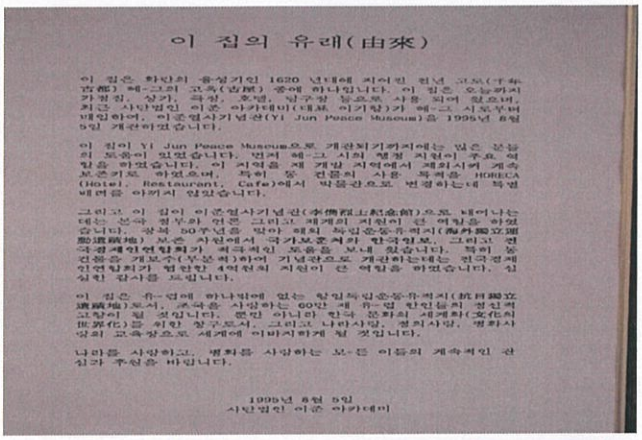
○ 후세대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준열사의 사랑과 정의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장님을 직접 뵙고 면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한편,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애국 정신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이었음

□ 방문면담 사진









이 집의 유래(由來)

이 집은 한반의 융성기인 1620 년대에 지어진 약 고도(古都) 헤그의 고옥(古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은 오늘까지 카페점, 상가, 극장, 주택, 임구장 등으로 사용 되어 왔으며, 최근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대표 이기탁)가 헤그 시로부터 매입하여, 이준열사기념관(Yi Jun Peace Museum)을 1995년 8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 집이 Yi Jun Peace Museum으로 개관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헤그 시의 행정 지원이 주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재 개발 지역에서 제외시켜 계속 보존키로 하였으며, 특히 옛 건물의 사용 목적을 HOTEL (Hotel, Restaurant, Cafe)에서 박물관으로 변경하는데 특별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준열사기념관(李儁烈士紀念館)으로 태어나는 데는 본국 정부와 많은 그리고 세계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년 50주년을 맞아 헤의 독립운동유적지(海牙獨立運動遺蹟地) 보존 사업에서 국가보훈처의 한국정부,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적극적인 도움을 보내 주셨습니다. 특히 농심은 개보수(부분적)하여 기념관으로 개관하는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많관한 4억원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은 유럽에 하나뿐에 없는 항일독립운동유적지(抗日獨立運動遺蹟地)로서, 주권을 사랑하는 60만 세 유럽 한인들의 정신적 고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세계화(文化의 世界化)를 위한 창구로서, 그리고 나라사랑, 겨레사랑, 평화사랑의 교육장으로 세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1995년 8월 5일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









7 기타 현장 방문
(베를린장벽기념관, 브란덴부르크문, 체크포인트찰리, 통일정 등)



베를린장벽기념관 방문 및 베를린장벽이 세워졌다가 철거된 현장



현재까지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




브란덴부르크문



체크포인트찰리

▣ **브란덴부르크문** : 1788년에 건설을 시작해 1791년에 완공된 것으로 당시 프러시아 제국의 개선문으로 만들어졌음.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었을 때 이 문은 분단선 역할을 하였고, 현재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에는 동·서독 분단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해 놓고,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음

▣ **체크포인트찰리** : 독일 베를린의 베를린 장벽에 있던 검문소로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연합군과 외국인, 외교관, 여행객들이 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을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관문이었음. 당시 서독의 연합군이 동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동독에서 체류지를 조사하는 곳으로 외국인 여행객 역시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동독에서 서독 쪽으로 나올 때는 검문을 받지 않았음.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1990년 6월 22일 이 검문소도 철거되었음

▣ **포츠담광장(통일정)** : 과거 포츠담 시와 베를린을 나누던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포츠담 광장에 세워진 한국식 정자인 통일정은 2015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 있는 상량전을 그대로 재현한 건축물로 아직도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염원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통일정






Herzlich willkommen
am koreanischen
„Pavillon der Einheit"
Welcome to the Korean
"Pavillon of Reunification"!
한국문화원


Welcome to the Korean
"Pavillon of Reunification"!



Ⅲ 연수후기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국 주 영 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던 남·북한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로 인해 좀처럼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 준비과정과 통일 이후의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준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선진화된 평생교육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으나 오늘은 지면 관계상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주로 논의하였던 독일의 통일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갑자기 찾아온 독일의 통일, 독일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꼭 30년 전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냉전의 유물이 해체됐고,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독일은 통일됐다. '냉전의 유물'동서 베를린을 가르고, 160 km에 달하는 서베를린 전체를 둘러쌌던 높이 3.6m의 베를린 장벽. 그 벽이 무너져 내린 지 30년이 된 지금, 독일인들에게 묻고 싶었다. "통일하니 행복하십니까?" 1991년 서독의 43%에 불과했던 동독의 1인당 GDP는 5년 만인 1996년 68% 수준까지 올라간다. 동독은 '급속한 경제 부흥기'를 경험했고, 독일은 연평균 3억 유로 이상을 동독 지역 현대화 작업에 투자했다. 특히 93년부터 2000년까지는 서독 도시재건 비용의 3배를 동독 지역에 지출했다. 그 결과 동서독의 임금 격차도 줄었고, 2008년엔 서독 주민의 78% 수준으로 올랐다. 현재 독일은 인구 8,200만, GDP

4조 달러로 유럽연합 최대 국가가 됐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명실상부한 유럽연합 대표 국가로 우뚝 섰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그늘도 있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문제였다. 1990년 동서독 경제가 통합되면서 동독 지역 제조업체의 40%가 통일 직후 문을 닫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통일이 아니라 식민 통치의 시작'이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동독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독 지역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남은 동독 청소년들은 꿈을 잃었고, 소외감이 커져 갔다. 서독인들 또한 불만이 많았다. 왜 굳이 통일해서 내 것을 동독에 떼어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고 한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 격차가 통일전 동서독보다 훨씬 크고, 독일과 달리 전쟁까지 겪었다는 점에서, 모르긴 몰라도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김상국 교수는"서독은 보수와 진보 세력이 인권 문제와 대 동독 지원 등에 있어 생각이 다르기는 했지만, 대립을 완화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했다, 한국도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 보수와 진보가 합의해 꾸준하고 일관된 방향의 준비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살펴볼 때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4일동안의 독일 일정을 마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처음 내린 순간부터 우리 눈을 놀라게 한건 바로 엄청난 숫자의 자전거와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들이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의 자전거 주차장은 무려 4층 건물에 7천여 대의 자전거가 빼곡이 주차되어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여기저기서 자전거를 쉽게 이용하는 모습, 그리고 차로

맨 우측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신호 등이 인상적이었다. 자전거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도 그리고 노약자와 유모차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한다. 모든 교통약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인상적이었다. 지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자전거를 편리하면서도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호른베이크 직업학교의 선진교육시스템을 비롯해, 이준열사 기념관 이번 정책연수를 통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은 알게 되어 기뻤고, 연수를 함께한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참고 **언론 보도자료**

전북연합신문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002면 종합

도의회 행정자치위, 국외 정책연수 성료

독일·네덜란드 찾아 한반도 평화통일·평생교육 우수사례 청취 등 역량 강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아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생교육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연수를 펼쳤다.

행자위는 독일을 방문해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남북통일의 길을 생각해보자는 목적으로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독일연방의회, SED독재청산재단,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김상국 교수는 "독일의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역시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통일이라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이어 독일연방의회에서는 고든 의회 사무국장을 만나 연방의회 구성 현황 및 역할과 기능,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독일과 네덜란드를 찾아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생교육우수사례에 대한정책연수를 펼쳤다.

또한, SED독재청산재단을 방문해 독일의 통일 이후 사회주의 동독의 독재 청산과정에 대한 설명과 재단의 운영현황 및 사업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사장인 앤 카민스키 박사는 독일의 독재청산과정에서 "독재자 및 독재권력에 협력한 자들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함으로써 수많은 동독의 독재세력 중 처벌을 받은사람은 35명에불과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4일간의 독일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0년간 네덜란드 1위 직업학교인 호른비크를 방문해 선진 평생학습정책과 방향과 운영체계와 성과 등을청취했다.

국내에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과정과 경력단절, 재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전주매일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행자위, 국외정책연수 성료

독일 · 네덜란드 찾아 평화통일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아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생교육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연수를 펼쳤다.

행자위는 독일을 방문해 서독과 동독의 통일과정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남북통일의 길을 생각해보자는 목적으로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독일연방의회, SED독재청산재단,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김상국 교수는 "독일의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역시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통일이라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이어 독일연방의회에서는 고든 의회 사무국장을 만나 연방의회 구성현황 및 역할과 기능,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SED독재청산재단을 방문해 독일의 통일 이후 사회주의 동독의 독재 청산과정에 대한 설명과 재단의 운영현황 및 사업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사장인 앤 카민스키 박사는 독일의 독재청산과정에서 "독재자 및 독재권력에 협력한 자들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함으로써 수많은 동독의 독재세력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4일간의 독일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0년간 네덜란드 1위 직업학교인 호른비크를 방문해 선진 평생학습정책과 방향과 운영체계와 성과 등을 청취했다.

국내에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과정과 경력단절, 재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성공적인 국외정책연수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자세로 내실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며 "국외정책연수를 통해 보고 배운 것들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